



에너지 정책은 국가 百年之大計

강길부
국회의원



-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강원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 주요르단 대사관 건설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건설경제국장
- 한국감정원 원장
- 건설교통부 차관
- 제17,18,19,20대 국회의원(울주군)
-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특별 대상(13)
-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품격 언어상(15)

영국 원전 수주 기대, 정부는 엇박자

지난 7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맡은 업체 ‘누젠’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약 3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짓는 건으로, 건설 비용만 21조원에 달한다.

2009년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UAE 원전 사업의 경우 총 4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한국의 플랜트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우디와 스마트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협정을 맺고, 우리 기술로 건설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되는 등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탈원전’만을 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험성을 확대 해석하여 원전을 줄여나가겠다고 천명해놓고, 원전 수출은 지속하겠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국가적 신뢰가 하락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원전 수출은 물론 다른 수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걱정이 크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추진 신중히 해야

지난 14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20

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에 의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10조원이 투입되고, 신규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 설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는 약 489.1km²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광역시(약 501km²)나 대전광역시(약 539km²) 전체 면적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같은 발전량을 내기 위해 필요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비용과 비교해 보면 25조원이면 해결될 일에 85조원이나 더 쏟아붓는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단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고집하는 것은 자칫 정부 보조금만 남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투기 광풍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 태양광 발전은 넓은 면적이 필요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며, 패널 세척제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풍력 발전도 거대한 구조물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 레이더 전파의 교란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30년까지 10.9%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전기요금도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 발전이 전망치보다 더딜 경우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가계 부담과 기업들의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력수급계획의 급격한 변화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원전 수출의 차질은 물론 기존 산업의 쇠퇴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시대착오적 방침에 목매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올바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그나마 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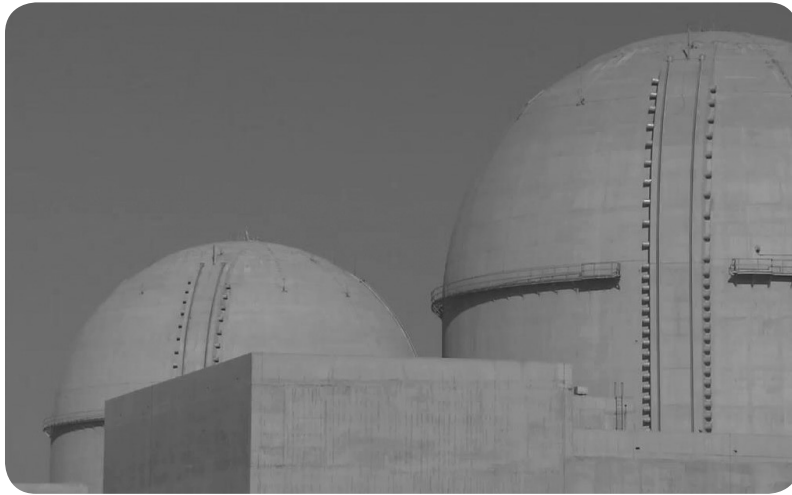
지난 10월, 수많은 논란 끝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정당성 논란, 3개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약 1,000억원의 손실 등 논란이 많았지만, 건설 재개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 36.6%, 중단 27.6%로 10%p 내의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해, 합숙을 통해 전문가 설명 및 토론을 거친 시민 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 59.5%, 중단은 40.5%로 19%p라는 매우 큰 차이로 건설 재개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이는 원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이해가 뒷받침 된다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몇 환경론자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환경적 최선의 대안 원전

그동안 원전은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핵심 시설로 자리잡아왔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30.3%의 발전량을 차지하는 원전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최선의 대안임에 틀림이 없다. 앞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특히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졸속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위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으로 국내 원전의 내진 성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 성능을 규모 6.5에서 규모 7.0으로 상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원자로 제어 등을 위한 안전 핵심 설비의 내진 성능이 규모 7.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력수급계획은 국가 산업을 지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춧돌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다시 늘리는 추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도 전기요금 급등하자 방향을 틀어 순차적으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줄이려던 계획을 5~10년 늦추기로 했으며,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1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은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

해 2010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재개했다. 영국도 신규 원전 31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원전 스와프' 정책을 통해 노후화된 원전은 정지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은 신규 원전으로 대체 나가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목표에 맞춰 단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맞춰 점차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여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특히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졸속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위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